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박 총 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 악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가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2년 세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과 네 차례에 걸친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에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0.4%가 난방비용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18.6%가 다소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¹⁾

2023년 들어 전기요금은 두 차례, 도시가스요금은 한 차례 더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는 2023년 3월 93.9%까지 상승한 후 6월 73.7%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 소상공인연합회,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2023. 2.

이 글에서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에너지 비용 증가 원인 및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하락하던 원유, LNG, 석탄 등과 같은 연료의 국제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하였다. 국제 연료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경우는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이라는 수요 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에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이 겹치면서 가격상승 폭이 더 확대되었다.

월평균 국제 원유 가격(두바이유 기준)은 2020년 4월 배럴당 23.3달러였다가 계속 올라 2022년 6월에 115.7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림세로 돌아서 2023년 6월 74.7달러까지 하락하였다.²⁾ 국제 석

2) 국제 연료 가격은 세계은행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s://www.worldbank.org/en/research/>)



탄 가격(호주산 기준)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 8월 톤당 50.1달러에서 2022년 9월 430.8달러까지 올랐다가 2023년 6월 139.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국제 LNG 가격(JKM 기준)은 2020년 9월 백만 BTU³⁾당 5.9달러에서 2022년 9월 23.7달러까지 올랐다가 2023년 6월 13.2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원유를 비롯한 연료의 국제 가격 상승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적자 확대와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 급증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곧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 4조 863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 5조 8,465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적자 규모는 2022년 32조 6,55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도 2021년 1조 7,656억 원에서 2022년 8조 5,855억 원으로 급증하였다.⁴⁾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였다. 2022년도 기준연료비 증가분 9.8원/kWh를 2022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4.9원씩 전력량요금에 반영하였다. 기후환경요금은 2022년 4월 단가를 5.3원/kWh에서 7.3원/kWh으로 조정하고, 2022년 7월 연료비조정요금은 5원/kWh으로 책정하였다.⁵⁾ 2022년 10월에 전력량요금을 추가로 kWh당 2.5원⁶⁾ 인상함에 따라 2022년에 kWh당 총 19.3원 인상되었다. 2023년 1월에는 전력량요금을 11.4원/kWh, 기후환경요금을 1.7원/kWh(7.3원

→ 9원) 인상하였으며, 5월에는 전력량요금을 8원/kWh 추가 인상하여 2023년 들어 전기요금은 kWh당 21.1원 인상되었다.

[표 1] 전기요금 인상

(단위: 원/kWh)

구분	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2022.4.	4.9	0	-
2022.7.	-	0	2
2022.10.	4.9 + 2.5	5	-
2023.1.	11.4	5	1.7
2023.5.	8	5	-

※ 주: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은 이전 대비 인상된 금액이고, 연료비조정요금은 변화분이 아닌 고정값

※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를 종합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2022년 4월, 5월, 7월, 10월 등 네 차례 인상하고, 2023년 5월 16일 한 차례 더 인상하였다. 2022년 총 4회 인상으로 연초 대비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MJ)당 5.4667원(38.4%) 인상되었고, 일반용 중에서 영업용1은 MJ당 5.2246원(37.1%), 영업용2는 5.2246원(39.9%) 올랐다.⁷⁾ 2023년 5월 16일 이후 주택용은 MJ당 1.0444원(5.3%), 영업용1은 1.0449원(5.4%), 영업용2는 1.0449원(5.7%) 올랐다.

3 현행 에너지 비용 지원제도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기 전에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자. 정부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법」 제16조의3과 이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권, 즉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과 세대

commodity-markets, 최종 검색일: 2023.7.19.)

3) BTU(British Thermal Unit)는 영국의 열량 단위로,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4) 미수금이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큰 경우에 생긴다.

5) 연료비조정요금 5원/kWh은 2023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6) 계약전력이 300kWh 이상인 일반용 전력(을)과 산업용 전력(을)의 고압 A 요금은 7원, 고압B와 고압C 요금은 11.7원 각각 인상하였다.

7)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를 말하며,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를 말한다.

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 14만 9,800원(1인 세대), 20만 5,700원(2인 세대), 29만 2,500원(3인 세대), 37만 9,600원(4인 이상 세대) 등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법 제2조 각 호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상황, 즉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동절기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료비는 월 11만 원을 최대 3개월 지원하고, 전기요금은 체납된 전기요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4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

(1)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

2022년 4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9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2021년 8월 0.75% → 2023년 1월 3.5%)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름에 따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한시적이거나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⁸⁾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사업장에서 사용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비용 인상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급격한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임금노동자를 비롯한 가계의 구매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지원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이 시행되면 현행 지원사업에 따라 이미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소상공인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임금노동자나 중소기업자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복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비용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지원 대상 에너지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현행 에너지 비용 지원은 취사나 난방에 사용된 주택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또는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또 다

8) 한국전력공사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던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6~9월 전기요금의 50%를 2~6개월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소상공인과 뿌리기업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른 점은 현행 에너지 비용 지원은 상시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은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는 비상시에 일시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데, 먼저 소상공인 지원시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먼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원시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요금이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소득인데,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비용에서 에너지 이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소득 기준과 에너지 이용 비용 비중 기준 둘 다 충족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과 함께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원시책이 시행되는 것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지원 기간은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요금 인상으로 증가한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노후 냉방기나 난방기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공인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하여 전력효율 향상 사업의 예산을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 중 400억 원으로 노후 냉(난)방기 교체(1.9만 대)와 식품매장 냉장고 문닫기(1만 대)를 지원하고 있다.

5 나가며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 또는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고정영업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2,202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을 50%(집합금지 업종) 또는 30%(영업시간 제한 업종)를 감면한 적이 있다. 비상시의 긴급 지원인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